



문서번호 : 26-03-사무처-07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공동 보도자료] “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기자간담회

전송일자 : 2026. 3. 17.(화)

전송매수 : 총 13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연맹, 대한어머니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부인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공동 보도자료

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기자간담회

일시·장소 : 2026. 3. 17.(화) 14:00,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오늘(3/17) 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과 제도 설명 등이 담긴 집단소송법 팩트북 <집단소송법의 정석> 발간을 앞두고 요약내용을 각 언론사와 시민들께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팩트북 <집단소송법의 정석>은 지난해 발생한 SKT, KT, 롯데카드, 쿠팡의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집단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집단소송제도의 내용과 원리, 해외 주요국들의 집단소송제도 도입 현황,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우려 의견과 이에 대한 설명 등의 내용을 한 권에 담은 자료집으로, 3월 중 공식 발간할 예정입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집단소송법의 정석> 발간을

앞두고 이 자료집이 향후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PDF 파일과 자료집으로 무상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현재의 민사소송법은 그 재판의 효과(기판력)가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쿠팡의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경우에도 피해자 각각이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생산과 대량유통이 보편화되고 디지털화가 가속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소액다수로 발생하는데 비해, 소비자 개개인이 기업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단이 마땅치 않고 소송비용이 과다하다보니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해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사태나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사태의 경우에도 실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단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총 5,971명이 피해자로 인정된 가슴기 살균제 사건의 경우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다가 2017년에야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제도가 시행되었고, 2018년 발생한 대진침대 라돈 초과 검출 사건의 경우에도 수 만개의 제품이 판매되었지만 1인당 약 100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데 그쳤습니다.
3. 더 큰 문제는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에 같은 소비자 피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여부에 따라 피해구조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16년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사건에서 미국의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통해 약 6천억원 규모의 민사합의를 이끌어낸 반면, 한국에서는 약 6만명의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소송을 유지한 단 7명에게만 1인당 7만원의 배상이 인정되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2015년 밝혀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차량 1대당 최대 1,350만원 수준의 배상을 받았지만, 한국에서는 차량 1대당 약 100만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되는 등 차별이 있었습니다. 결국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제품 안전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안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보니, 분쟁조정절차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소극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4. 그러나 팩트북 <집단소송법의 정석>에 따르면 경제 규모가 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7개 국가에서 모두 사실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집단소송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 튀르키예, 스위스 3개국이지만 튀르키예는 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하고 스위스는 권리양도를 통해

소송이 가능해 사실상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나아가 IMF 기준 GDP 100위권 국가들로 그 범위를 넓혀봐도 확인이 가능한 최소 65개국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었고, 확인이 되지 않는 나라들까지 조사 범위를 더 넓히면 그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해외 주요국들이 각자의 환경에 따라 대표당사자 50인 내외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나 공익단체나 소비자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 또는 이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만큼 한국도 빠른 논의를 통해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집단소송법안을 정부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집단소송법 도입을 언급한만큼 반복되는 소비자 권리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최소한 올해 안에는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세계 각국의 집단소송제도로부터 배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간담회 개요

■ 첨부자료2. 국내외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로 본 집단소송제도의 필요성

■ 첨부자료3.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한 우려 의견과 이에 대한 반박

■ 첨부자료1.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 “세계 주요국의 집단소송법 도입 현황부터 제도 설명까지” 집단소송법 팩트북 발간 기자간담회
- 일시 장소 : 2026년 3월 17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공동주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진행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발제1. 한국의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 :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10분)
- 발제2. 해외 주요국의 집단소송법 도입현황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20분)
- 발제3.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한 우려의견과 이에 대한 설명 :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변호사 (10분)
- 질의응답 (20분)
- 문의 : 김주호 민생경제팀 팀장 010-4706-7097, min@pspd.org

▣ 첨부자료2. 국내외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로 본 집단소송 제도의 필요성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가 동시에 집단적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 본 자료에서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집단소송 제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 한국의 집단적 소비자피해 및 시사점

I -1. 한국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

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사건 개요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인해 사망·폐질환 등 심각한 건강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2011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됨. 이후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대표적인 제조물 관련 소비자 피해 사건으로 평가됨.
-------	--

피해 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폐 섬유화 등 중증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한 다수의 사망 사례가 보고됨.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8천 명 이상이며, 이 중 사망자 1,398명 포함 총 5,971명이 피해자로 인정됨. (2026. 2. 28. 기준)
피해 구제	피해자들이 제조·판매 기업을 상대로 개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진행함. 그러나 피해자가 제품 사용과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소송과 피해 인정 절차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정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 인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함.

② 대진침대 라돈 초과 검출 사건

사건 개요	2018년 국내 매트리스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생활제품 안전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평가됨.
피해 내용	매트리스 내부에 사용된 음이온 파우더에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면서 장기간 사용 시 폐암 등 건강 피해 가능성이 제기됨. 문제가 된 매트리스는 여러 모델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수만 개 규모의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됨.
피해 구제	정부는 문제 제품에 대해 전량 리콜을 실시하고 제품 수거 및 폐기 절차를 진행함. 피해 소비자들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건강 피해 발생 여부와 침대 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따라 1심에서는 소비자가 패소하였고, 이후 장기간의 소송 끝에 2심에서 1인당 약 100만 원의 위자료가 일부 인정됨.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실질적인 구제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③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사건 개요	2024년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플랫폼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해 대규모 정산 지연이 발생하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거래 구조의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
피해 내용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소비자 역시 결제 후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정산 지연 금액은 약 1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수많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짐.
피해 구제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 구제를 진행하고 있음. 정부 역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플랫폼 거래 구조 특성상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개별적인 권리 구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1-2. 한국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의 시사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대진침대 라돈 초과 검출 사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모두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한 번의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II. 해외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 및 시사점

II-1. 해외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

① Equifax 데이터 유출 사건

사건 개요	2017년 미국 신용평가회사 Equifax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해 대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됨.
피해 내용	이름, 주민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 등 약 1억 4,700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됨.
피해 구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19년 최대 약 7억 달러(당시 약 8천억 원) 규모의 합의가 이루어짐.

② Johnson & Johnson 베이비파우더 사건

사건 개요	Johnson & Johnson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발암물질인 석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간 사용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됨.
피해 내용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 사용으로 난소암 등의 암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피해 구제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2023년 해당 기업은 피해 보상을 위해 약 89억 달러(당시 약 11조 원) 규모의 합의안을 제안함.

II-2. 해외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의 시사점

해외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제조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소송 제도가 활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고 소비자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집단소송을 통해 개별 피해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대규모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문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국내 사례에서 나타난 개별 소송 중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에서 집단소송법 도입이 왜 시급한 지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III. 한국과 외국의 비교

III-1. 동일 사건으로 보는 한국과 해외의 소비자 피해 구제 차이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 긴급토론회 자료집(2026. 2. 5.) 40p 참고)

① 애플(Apple) 배터리 성능 저하 사건

사건 개요	2016년 애플이 일부 아이폰에서 배터리 노화에 따른 기기 꺼짐을 막는다는 이유로 배터리 성능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설명 없이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논란이 발생함.	
피해 구제		
해외의 소비자 피해 구제		한국의 소비자 피해 구제
미국에서는 2018년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최대 약 6천억 원 규모의 합의가 이루어져 소비자들에게 배상이 이루어짐.		한국에서는 2018년 약 6만 명의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 이후 항소심에서는 소송을 유지한 7명의 원고에게 1인당 7만 원의 배상이 인정되었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계속 심리 중임.임.

② 폭스바겐(Volkswagen) 배기가스 조작 사건

사건 개요	폭스바겐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과정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시험 상황에서는 정상범위 내 작동하지만, 실제 주행 중에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한 사실이 2015년 밝혀짐.	
피해 구제		
해외의 소비자 피해 구제		한국의 소비자 피해 구제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6년 소비자들은 차량 환불 또는 보상 등의 방식으로 차량 1대당 최대 약 1,350만 원 수준의 배상을 받음.		한국에서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일부 위자료만 인정하여 차량 1대당 약 100만 원 수준의 배상이 인정되는 등 해외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의 피해 구제에 그침.

III-2. 동일 사건으로 보는 한국과 해외의 소비자 피해 구제 차이의 시사점

애플 배터리 성능 저하 사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은 동일한 기업의 행위로 인해 전 세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이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구제 방식에서는 한국과 해외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배상 규모의 차이이다.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수준의 소비자 보상이 이루어졌다. 반면 한국에서는 개별 소송 중심의 구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자료만 인정되는 등 배상 규모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구제 절차의 효율성 차이이다. 해외에서는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가 하나의 소송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소송 비용과 절차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나타난다.

셋째, 피해 구제의 신속성 차이이다.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을 통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대규모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개별 소송이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서도 제도적 차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의 범위와 속도, 실효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앞서 살펴본 국내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해외 소비자 피해 사례, 그리고 동일 사건에서 나타난 한국과 해외의 소비자 피해 구제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한국의 현행 개별 소송 중심의 구조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동일한 사건임에도 해외에서는 집단소송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상 규모와 구제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하나의 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첨부자료3.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한 우려 의견과 이에 대한 반박

장철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변호사, 한수민 경실련 사회정책팀 간사

1. 소송을 제기할만한 일이 아닌데도 소송이 마구 제기(남소)된다?

○ 우려 의견

-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미국식 제도를 차용하여 이유없는 소송 남발인 ‘남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비판 측은 미국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건수가 10년 사이 급증한 사례를 근거로 들며, 요건 완화와 적용 분야 확대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 반박 및 설명

- 국내 현실은 이와 대조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 후 20년간 제기된 소송은 12건에 불과하며,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도 역시 10여 건에 머물러 있다. 이는 남소를 걱정하기보다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구제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 우리 법체계는 '소송허가제도'라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현행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권리 실현에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일 때만 소송을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허가 절차가 집단소송법 제정안에서도 유지되므로, 근거 없는 남소는 사전 단계에서 충분히 차단될 수 있다.
- 실제로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2025년까지 약 20년 간 소가 제기된 사례는 12건으로 이 중 소송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은 9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 우려 의견

-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기업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고, 변호사 업계의 배만 불리며 법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소송 전 증거조사, 자료 등 제출명령, 입증책임 완화, 배심원제 도입 등으로 인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반박 및 설명

-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적 기능이 핵심이다. 제도가 안착되면 기업 스스로 피해 예방에 주력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기업 활동 위축과 직결시키는 것은 과도한 논리적 비약이다.
-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제도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증거조사 절차의 설계로 해결할 사안이다. 비밀 유출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거나 법원의 ‘인 카메라(in camera)’ 심리¹ 등 절차적 안전장치를 보완함으로써, 기업의 핵심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3. 법체계의 정합성이 훼손되고 위험 소지가 있다?

○ 우려 의견

-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대륙법계²를 따르는 우리 사법 체계를 벗어나 미국식 제도를 편의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의 정합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제외신고방식(Opt-out)’이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반박 및 설명

-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대표확인소송), 프랑스, 일본 등도 이미 각국의 실정에 맞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대륙법계와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미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을 시행해 왔으며,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도 단체소송제를 운영하며 법적 실효성을 검증받았다.

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² 성문 법전을 재판의 절대적 근거로 삼는 법체계로, 법관이 법조문을 해석·적용하는 원칙과 법 체계의 논리적 정합성을 중시한다. 로마법에 뿌리를 두고 독일·프랑스에서 체계화됐다.

- 제외신고방식의 위헌성 역시 절차적 보완으로 해결 가능하다. 구성원에게 충분한 고지와 제외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면, 신고하지 않은 이들이 판결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오히려 소송경제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정당하다. 또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같이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변하도록 법적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

4. 기획소송이 벌어지고 법조계에 브로커가 판을 칠 것이다?

○ 우려 의견

-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합의금을 노린 기획소송을 남발시키고, 법조 브로커나 자격 미달의 소송대리인이 개입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원고 측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피고 측 대리인 없이 소송 진행이 가능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부추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 반박 및 설명

- 기획소송은 제도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소송허가 단계의 설계로 통제할 사안이다. 법원은 소송 허가 시 대표당사자의 적격성과 소송대리인의 적절성(경력, 보수 약정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부당한 소송을 걸러낼 수 있다. 또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화해나 소 취하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사익만을 취하려는 기획소송은 차단 가능하다.
- 법조 브로커 문제는 집단소송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현행 법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제도 도입 반대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소액 피해자들이 음성적인 브로커를 통하기보다, 공적이고 투명한 사법 절차 안에서 체계적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